

환경이나 경제나

- 신경제와 새로운 환경 정책 -

申義淳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이 자료들은 지난 6월 1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환경기자클럽주최 환경정책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내용을 옮긴 것이다. <편집자註>

1.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사고

경제학자들은 환경문제를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는 외부효과로 인식하여 왔다. 즉 어느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이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침으로써 부의 외부효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때 오염배출자가 제3자에게 미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될 경우에 과다오염행위가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학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적정수준으로 오염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나이고,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배출기준과 벌칙을 통한 직접규제와 환경세의 부과나 오염배출권의 거래를 통한 경제적 유인제도를 제시하였다.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직접규제방식이 주로 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직접규제의 준수비용이 과다하고 기준 이하로 오염을 줄일 유인이 오염배출자에게 존재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보다 비용효과적으로 오염저감을 가져올 수 있고 저공해기술개발의 유인을 제공하는 경제적 유인제도를 함께 채택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 경제적 유인제도는 그 이외에도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을 가능케 한다는 이유로 정책입안자들의 선호도가

늘고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외부효과외의 문제로만 파악할 경우 자연이 감당할 수 있는 자정능력을 간과함으로써 환경파괴의 악화를 사전적으로 저지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또한 경제적 유인제도를 통해 적정수준으로 오염활동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환경피해의 크기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오염저감을 위해 경제활동의 축소 및 비용지출을 감수하겠다는 사회적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즉 경제적 유인제도의 실시를 위한 전제로서 「오염자부담 원칙」이 정착되어야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경제주체간의 비용분담과 오염방지를 위한 투자재원 조달의 문제와 직결된다.

지금까지 환경문제는 사회문제의 일부로 다루어져 왔으며, 경제문제로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은 소수의견이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사회가 환경문제를 공해문제로 파악하여 왔고, 공해저감을 위해 정부는 직접규제와 처벌등 행정력에 주로 의존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오염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의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은 오염처리를 위해 정부, 기업, 가계가 지출한 비용과 잔존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오염피해비용의 합계이다. 오염피해의 증가는 실제적으로 국민후

생의 감소를 가져오나 GNP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간접적으로 노동력의 상실은 負, 의료비지출의 증가는 GNP에 正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편 오염처리비용의 증가는 GNP에 正의 효과를 가져온다. 즉 환경의 파괴와 국민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초래하는 공해산업이 GNP 증가에 미치는 효과는 단기적으로 오히려 저공해산업에 비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환경오염의 증가는 자연환경의 파괴와 노동력의 상실을 가져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환경오염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염피해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오염 처리비용의 거시적 추계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용역의 가치만 고려하는 GNP와 GNP 성장률의 개념이 얼마나 허구적인 숫자 놀음인가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환경문제는 특정지역, 특정국가를 초월하여 국제 문제화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브라질의 리우에서는 세계 150여개국 정상 및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죽어가고 있는 지구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환경관련 기술이전 및 자금원조 등에 대해 선·후진국간에 상당한 이견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ESSD(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를 원칙으로 하는 「리우선언」과 그 행동강령을 밝힌 「의제21」이 채택되었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이 채택됨에 따라 환경문제의 국제화를 촉진하였다. 앞으로 환경보호주의는 이념적 양극체제를 대신할 경제보호주의와 함께 신세계 질서를 이끌어 갈 중심적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국제적으로 환경보호정책이 강화되고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이 속속 체결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협약들이 정식으로 발효될 경우 환경보호주의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할 소지가 커지고 있다.

2.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지속가능개발

환경과 관련한 국내외적 상황변화는 그동안 환경보전보다 개발우선정책을 추구해 온 우리나라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경제발전에 있어서 성장과 환경보호를 상충적인 관계로 보지 말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보아야 한다. 앞으

로의 경제 발전은 단순한 양적 성장보다 「환경적으로도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의 형태를 가져야 한다. 즉, 우리 자신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환경보호는 꼭 지켜야 할 절대 명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둘째, 자원빈국으로서 해외자원의존도가 높고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를 지속해 갈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는 각국의 환경보호 강화추세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리우회의 이후 세계 각국은 「환경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의 개발」이라는 유엔환경개발회의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내 환경 및 경제·산업정책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지구환경보호라는 대의명분하에 자국의 환경기준, 제도에 맞지 않는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등 환경규제수준의 차이에 따른 무역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소위 그린라운드의 제기에 관한 움직임이다.

세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서둘지 않을 경우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유지는 물론 국내시장에서도 살아남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90%를 넘고, 폐기물의 재활용율이 극히 저조한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와 환경파괴적 제품생산구조를 변화하지 않는 한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이 지극히 어려워질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네째, 환경문제를 도의시키고 경제성장만을 추구할 경우 국제무역에서 불이익을 당할 뿐 아니라 국제외교에서도 고립될 수 있다. 전세계의 모든 국가가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환경문제를 최대이슈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거나 무관심한 나라는 외교적으로도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속가능개발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나 일부 시민운동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고, 정부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책은 환경보호정책의 수립·시행과 함께 산업정책을 통해 관련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지원하는 포괄적인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

지속가능개발을 추구하는 이유는 물질적 풍요와 쾌적한 자연환경을 동시에 누림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자원집약적 경제성장은 새로운 자원 및 에너지의 사용을 필요로 하고 이는 환경에 새로운 부담을 주게 된다. 따라서 성장과 환경보호의 조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그리고 기술집약적 경제성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기술집약적 경제성장, 환경보호, 그리고 에너지 및 자원절약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세계의 기둥이 되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기술발전이다.

<그림-1>은 이들 세개의 기둥이 가지는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장일변도의 경제정책을 추구하여 왔다. 그러나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함께 환경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지속가능개발을 위해 어느 정도 경제성장률이 감소할 수 있음을 감수해야 한다. 앞으로의 성장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원·에너지의 절약과 재활용, 그리고 끊임없는 기술혁신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가 지속가능개발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날로 강화되어 가는 국제환경보호 움직임에 적극 대응해야 하며, 대내적으로는 환경친화적 경제구조의 구축, 환경사업의 육성, 환경보호활동의 강화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야 할 것이다.

3.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환경정책 구상

(1) 경제성장과 환경보호간 상호관계의 이해

경제와 환경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시각은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개발연대에는 절대적 성장우위론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환경과 경제를 상충관계로 보았다. 이러한 시각은 국가의 정책기조를 이루어 일반시민의 의식까지 지배하였다. 환경문제는 성장의 그늘에 가려 문제시 되지도 못했으며, 환경보호를 주장하는 일부 선각자들은 반성장론자로 매도되기도 하였다. 성장을 위한 자연개발과 환경오염은 불가피한 것이고, 환경문제는 성장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사고가 지배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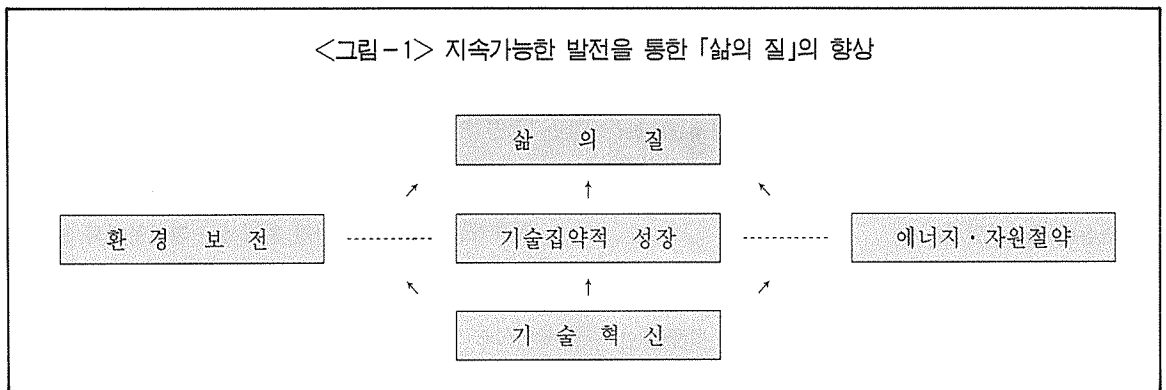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아직 개발도상국으로 당분간은 환경 우선적

이기 보다는 환경친화적 발전방향을 지향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환경보전과 오염저감을 위해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수용할 것이며 거시적 관련지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요청된다.

경제성장은 환경파괴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보호론자들은 환경보호를 위해 성장 자체를 희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환경보전은 경제성장과 함께 상충관계가 있지는 않다. 오히려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제성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그림-2>에서 어느 국가의 산업화가 시작되기 이전의 環境의 質을 E_0 라고 하자. 산업화의 진행과 함께 환경질은 악화되기 시작하여 자원집약산업이 전성기에 도달한 Q_1 에 이르면 환경질은 최악의 상태인 E_1 으로 떨어진다. 그 후 산업구조 조정과 환경보전투자에 힘입어 환경질은 점차 개선된다. 이 가설에 의하면 경제성장단계의 일정 시점을 지난 후부터 경제성장과 환경질의 개선은 상호보완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통한 소득수준의 향상이 환경개선을 위한 필요조건이 될 수는 있어도 결코 충분조건은 아니다.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환경자원이 자유재가 아니라 적절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정착과 함께 이에 따른 제도적 정비가 수반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속적인 투자와 의식적인 개선노력이 수반되어야만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경로 2와 같이 환경의 질이 경제성장과 함께 계속 악화되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환경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의 제고는 정부의 환경관련 조직강화와 환경보호를 위한 공공지출의 증가를 통해 그리고 기업의 투자전략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환경친화적 경제발전의 경로를 선택하도록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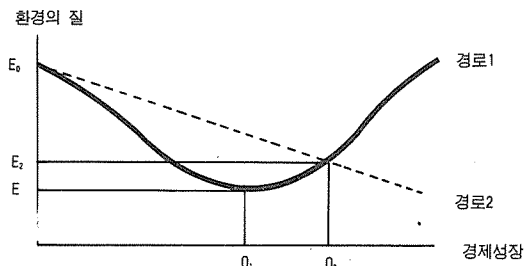


도하게 된다.

그로스만(Grossman)과 크루거(Krueger) (1991)는 세계 보건기구(WH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1976년부터 측정해오고 있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도시지역 대기오염도 자료를 이용하여 각 도시의 아황산가스 배출농도와 그 도시가 속한 국가의 개인소득간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 의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1988년 기준으로 미화 5,000달러에 도달하는 것을 전환점으로 도시지역의 아황산가스농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90년에 5,000달러를 넘어 5,569달러를 기록하여 대기오염과 관련하여 최악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필요조건은 충족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1,592달러에 불과하였던 1980년에 이미 환경전담 행정부서인 환경청을 설립하는 등 환경문제에 일찍부터 신경을 써왔다.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이 1960년대말부터 본격적인 환경투자를 실시하였고, 태국과 인도네시아와 같은 후발개도국은 최근에 들어와서야 환경문제를 눈을 돌리고 있음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환경개선에 관한 국가적 인식과 노력을 다른 나라

<그림 -2> 경제성장과 환경



자료 : John Pezzey, "Economic Analysis of Sustainable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World Bank Environment Department Working Paper No. 15, March 1989, p. 28.

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앞서 왔음을 자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세계의 대도시 중 대기오염이 가장 극심한 도시 중의 하나이며 WHO와 UNEP가 공동으로 추진해 온 지구환경감시체계(Global Environmental Monitoring System : GEMS)의 자료분석결과에서 밝혀져 환경개선을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이 충분치 못하였음이 증명되었다.

(2) 사후보정정책에서 사전예방책으로의 전환

환경보호정책에는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오는 根源인 인간의 사회, 경제 및 정치적 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원천지향

적 예방정책과 근원 그 자체에 대한 가치판단은 유보하면서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피해의 저감에 초점을 맞추는 결과지향적 치유정책이 있다. 원천지향적 예방정책은 결과지향적 치유정책에 비해 비용면에서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그 효과도 보다 확실하다. 또한 근원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여러 종류의 잠재적 피해효과를 동시에 회피할 수 있으며,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불가역적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문제는 원천지향적 예방정책은 다양한 이해그룹의 저항에 부딪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쉽이나 국민의 지지가 없이는 전반적으로 실시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환경정책은 사후보정적 측면을 중시하였으며, 제도의 발전이나 법령의 제정도 오염제거나 피해방지 및 보상 등과 같이 사후적 처리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지속가능개발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경제간의 악순환 고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야 한다. 즉 모든 경제주체는 환경오염의 발생후 이를 제거하거나 오염피해의 저감수단을 강구하는 사후적·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예방적·원인지유적 문제해결을 시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기업은 사전 환경투자를 통해 오염발생을 근원적으로 줄임으로써 오염처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하며, 정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환경개선투자에 참여하도록 금융, 세제지원 등 경제적 유인을 부여하여야 한다.

둘째, 개발정책과 환경보호정책의 통합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개발정책의 타당성 평가시 환경영향을 고려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는 win-win 조건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가격 보조금제도는 산업구조를 에너지 집약적으로 만들 뿐 아니라 이를 통한 대기오염의 심화에도 기여하게 되므로 이러한 정책은 시정되어야 한다.

네째, 기업설립 및 산업공단 선정시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미리 예측하여 폐기물 처리방법 및 처리를 위한 입지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소극적 환경정책에서 적극적 환경정책으로의 전환

지속가능개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환경문제와 관련된 오늘의 위기상황을 새로운 기회에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정책은 오염피해의 저감 및 예방 등 소극적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환경산업을 육성하고, 환경친화적 기술 집약적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환경관련비용

을 절감할 뿐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창출하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에너지저소비형으로 시급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80% 이상으로 매우 높고 에너지소비가 매 10년마다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연간 10%를 넘어 세계 최고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기후변화협약의 채택에 따른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규제는 국내산업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생산당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에너지다소비업종인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섬유, 종이산업, 그리고 에너지효율 기준의 적용을 받는 전기, 전자, 자동차, 기계산업 등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또한 CO₂ 배출규제시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이 대폭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적으로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 종합적 환경정책의 추진

환경에 관한 의사결정이 부적절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특정 환경문제의 발생을 종합적 환경측면에서 바라보지 않고 각기 분리된 정책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당면한 환경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보다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과정과 구조를 개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각 부문을 담당하는 정부부처간의 유기적 협조관계를 강화하고, 지방정부 및 비정부환경관련 조직과의 협조하에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특히 거시경제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지속가능하도록 자원을 관리하여 환경을 보호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개발목표가 경제, 사회 및 환경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개혁이 필요한 사항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다.

첫째,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모형이나 생태계모형의 개발,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의 개발,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의 적극적 실시 등이다.

둘째, 의사결정의 메커니즘이나 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 허가, 적발, 검토, 참여 그리고 청원메커니즘 등과 같은 것이 있다.

세째, 종합적 의사결정의 실시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구조의 개혁」이다. 즉 환경문제와 관련된 주요사안에 대해 집단적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조직상의 장치를 공식적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개혁은 새로운 조

직이나 단위조직의 설립, 기존 조직의 개편, 또는 양자의 조합을 통해 달성된다.

환경정책의 종합적 수행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나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 학계 그리고 환경단체 어느 누구도 선뜻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제시하기를 꺼리고 있다. 그 이유는 「종합성」의 강조는 현대사회의 특성 중 하나인 「전문성」과 배치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교육, 경험 그리고 개인적 성향에 의해 좁은 범위의 분화된 분야에서만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균형 있는 시각으로 종합적 환경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적임자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종합적 환경정책을 제도화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경험과 자질을 갖춘 정책입안자를 동원하여 지금까지 개발된 「종합적 환경정책」에 관한 국내외의 아이디어와 경험을 종합하여 혁신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둘째, 이러한 정책대안을 입법화할 수 있도록 지지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이러한 혁신에 대한 잠재력 필요성을 구체화하기 위한 촉매역할을 담당할 획기적인 사건이 발생하여야 한다.

위에 열거한 세가지 필요조건은 상호보완적이며 모든 국민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환경사건이 발생하면 환경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이에 따라 종합적 환경정책에 대한 지지도 높아진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적절한 아이디어가 있느냐 하는 것과 경험있는 정책입안자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부처에 배치되어 있는가가 주요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적 환경정책」은 기존의 환경정책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전통적으로 환경정책은 환경영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으로 대기 및 수질오염, 폐기물 처리, 자원의 고갈, 기후변화, 독극물 중독, 그리고 생태계 보전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종합적 환경정책」은 환경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개발정책, 농림수산정책, 교통정책, 에너지정책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부문에서 사전적인 환경정책이 고려되지 않는 한 환경정책은 지금과 같이 사후적이고 부분적인 것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종합적 환경정책」이란 환경지향적 사고와 의사결정으로의 획기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5) GNP에서 그린GNP로의 성장지표 전환

국가발전전략을 성장위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GNP 개념을 그린GNP 개념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린GNP의 개념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이 개념은 경제성장에 따른 재생산가능 자연자원의 고갈과 환경파괴를 기존 GNP에서 차감하여 구하여 진다. 예를 들어, 경제활동의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 교통혼잡, 생명유지체계의 파괴가 초래하는 건강 및 생명의 상실,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등의 실질생산 감소, 수돗물 공급비용의 증가, 건물 및 기계의 부식, 산림벌채에 의한 홍수피해의 증가, 건물 및 기계의 부식, 산림벌채에 의한 홍수피해의 증가, 도시매연 및 스모그현상에 의한 쾌적한 생활환경 및 옥외위락공간의 상실을 생태계의 파괴 및 생물종의 다양성 상실 등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여 이를 GNP에서 빼어주는 것이다. 세계은행의 델리박사는 「지속가능 경제후생지표(ISEW : Index of Sustainable Economic Welfare)」를 개발하여 미국경제에 대하여 적용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국가전체의 환경피해를 경제적 가치로 추정한 연구에 의하면 네덜란드에서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비용이 1986년에 GNP의 0.5%~0.9%였고, 또 독일에서는 환경오염의 피해비용이 GNP의 6%로 추계되었는데, 이 중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쾌적감의 상실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전체의 46.3%, 소음에 의한 주택가격 하락효과가 28.9%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환경오염의 피해는 기존의 GNP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실제로 국민의 후생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가발전 지표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총량위주의 GNP보다는 소득분배, 환경보전, 도시화 등 인간의 삶의 질을 규정하는데 좀 더 적절한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표를 활용하는 것은 발전이념을 수정한다는 의의표시이므로 하위정책부문의 우선순위도 달라진다.

4. 맺는말

한국경제는 수년간 성장둔화, 무역적자, 그리고 물가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아시아의 네마리 용중에서 우리만 선진국의 문턱에서 머뭇거리고 있다. 신정부가 경제회생을 최대의 과제로 삼고 전력투구하고 있으며, 대다수 국민이 신경제정책의 추진에 찬성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경제의 동태적 성장과정에서 경기상승기와 경기하강기는 반드시 있는 법이며,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경기침체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조정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과정인지도 모른다. 일본도 1970년대에 심각한 경제성장둔화를 경험하였으나, 산업구조의 고도화, 에너지절약, 그리고 환경보호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1980년대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의 경제대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었다.

자연과 환경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유한하며 엄격한 자연법칙에 의해 지배받고 있다. 경제정책도 이러한 자연의 유한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환경을 이용하는데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자제가 되어 있는 시민과 국가만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삶을 누릴 권리를 부여받게 될 것이다. 세계은행의 델리 박사가 주장하였듯이 경제학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공정한 분배이외에 자연의 유한성을 고려한 적정규모 이내로의 성장을 제 3의 정책목표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국도를 보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이 국민의 진정한 바람이라면 보다 멀리 내다보이는 정책, 즉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각 부처는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외부효과에 개별적으로 대처하여 왔다. 즉 경제개발계획, 사회정책, 에너지 정책, 환경법의 제정 및 시행에 있어서 정책 상호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고 부분적 국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문제발생의 원천에 대한 본질적인 치유방법을 모색하기 보다 밖으로 드러나는 문제의 사후적 해결에만 매달려 왔다.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접근과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우리의 사회와 경제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의 이념에 보다 충실하여야 한다. 환경과 경제문제의 통합적 사고야말로 국내외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한 지름길이다. ♠

깨끗한 환경은 소중한 유산입니다.